

美 해군함정 건조 난항… K-조선, 전투함 신조시장 진출 기대

美 해군, 구축함·보급유조선 RFI
HD현대·한화오션 함정 역량 부각
2035년까지 전투함 수요 확대
한화, 오스탈USA 인수로 현지화
해외 건조 제한·의회 승인이 변수

미국 해군이 대형 수상전투함을 중심으로 함대 증강에 나서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역할이 국내에서 이뤄져 온 유지·보수·정비(MRO)를 넘어 미 해군 신조 전투함 건조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13일 미 의회에산국(CBO)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해군의 대형 수상전투함 연평균 구매 예산은 지난해 계획(약 110억 달러) 대비 내년 계획(190억 달러)에서 3분의 2 이상 증가한다. 오는 2035년까지 건조해야 할 대형 수상전투함의 톤수도 두 배 이상 늘어나며, 핵추진 전함 15척 건조에는 내년부터 2056년까지 약 2750억 달러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 같은 대규모 전력 증강 계획에도 미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24년 말 해군에 인도 예정인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III) 선도함 '충남함'의 시운전 모습.

국 조선업계는 극심한 생산 병목을 겪고 있다. 미 정부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민간조선소들은 콜럼비아급·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연간 건조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30억달러 이상이 투입된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계약된 6척 중

4척의 건조가 중단되는 등 수상함 사업에서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건조 난항이 이어지자 미 해군은 최근 한국 조선사에 구축함급 수상전투함과 중형급 함대 보급용 유조선 건조 관련 정보 요청서(RFI)를 발송했다. HD현대중공업

과 한화오션은 두 RFI에 모두 참여했고, 삼성중공업은 보급유조선 RFI에 응했다.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검증된 함정 건조 역량을 갖추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미 알레이버크급과 동일한 이시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8500톤급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페루·필리핀 등 해외 수출용 수상함을 건조·인도한 경험이 있다.

프랑스 해군 전문매체 네이벌뉴스는 이번 RFI가 실제 발주로 이어질 경우 1922년 이후 104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에서 설계·건조된 전투함이 미 해군에 취역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 영국제 뉴올리언스급 방호순양함 퇴역 이후 미 해군 전투함은 모두 미국에서 설계·건조돼 왔다.

한국 조선업계의 미국 현지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화그룹은 최근 미국 군함 조선사 오스탈USA를 최대 12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오스탈USA는 버지니아급·콜럼비아급 핵잠수함 모듈을

제작하고 있으며, 연간 콜럼비아급 1척과 버지니아급 2척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모듈 공장도 건설 중이다.

변수는 법적 규제다. 미국은 바이른스-톨레프스 수정안'을 통해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실제 수주를 위해서는 의회의 국가안보 면제 조항 적용과 예산 승인, 자국 조선업계의 반발 극복이 필수적이다.

미국 내에서도 제도 개선 움직임은 시작됐다. 동맹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상·하원에 발의되어 소관 군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 조선업계에 SOS를 보낸 상황"이라며 "최근 보낸 RFI는 법적·제도적 규제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을 구체화하려는 출발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metro

서울시 '미리내집' 128세대 공급… 31일부터 청약

신혼·신생아 가구 시세 60~70% 적용
출산 땀 장기전세 우선이주권 부여
자녀 있으면 최장 14년 거주 가능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시세의 60~70% 수준 임대료가 적용되는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세대를 공급한다. 청약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시작하며, 입주는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14일부터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등에 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신규 53세대와 잔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소통의 날 행사에서 미리내집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시스

공가 75세대 등 총 128세대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 한부모 가족 등이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가구는 200% 이

하여야 한다. 총자산가액은 3억6200만원 이하하여야 한다.

임대료는 수급자 계층 또는 소득 80% 이하 가구의 경우 시중 시세의 60%, 소득 130% 이하 또는 맞벌이 200% 이하 가구는 시세의 70% 수준이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기본적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

구는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매 입임대주택 거주 중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은 SH를 통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당첨자 발표를 거쳐 2027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서울시는 청약 전 주택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28~29일 도봉구 빌드아르페아파트에서 '구경하는 집'을 운영한다.

빌드아르페아파트는 총 30세대 규모로, 평균 전용면적은 61.46㎡이며 방 3개 구조다. 공개 시간은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2층 주민공동시설과 902호, 904호를 둘러볼 수 있다. 현장에서는 사업 안내 리플릿 배부와 상담도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lhi@



metro

7월 車수출 역대 최대 친환경차가 실적 이끌어

지난 7월 한국 자동차 수출이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수출과 내수, 생산이 동시에 늘어나는 '트리플 성장'을 이뤄냈다. 친환경차 수출 호조와 조업일수 증가가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다만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등으로 대규모 생산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상반기부터 이어온 호조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7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한 62억 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7월 최고치인 59억 달러(2023년)를 넘어선 역대 최대 실적이다. 같은 기간 내수 판매량(13만 9000대)과 생산량(35만 2000대)도 각각 0.5%, 11.3% 늘었다.

수출을 이끈 주역은 친환경차였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5.5% 증가한 25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첨단산업 '현장 규제' 걷어낸다… 4.2조 투자 조기 집행

용인 반도체 증설 별도 건축허가 추진
구미·포항 배터리 재활용 입주 허용
RE100 특례구역 지정 한도 50% 확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 산업단지에 추가로 들어서는 증설 건축물의 경우, 기존 건축허가와 별도로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산업·RE(재생에너지)100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에 총 4조 2000억 원 상당의 투자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장 증설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 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규제를 푼다는 방침이다. 이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1차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그간 현행 건축법상 신규 건축물을 증설할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하는 탓에 증설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는 증설 건축물에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별도 허가가 가능해지면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또 반도체 기업이 실증 지원법인인 '트

라티랩'에 출연하는 재산에는 증여세를 비교세한다. 이로써 8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경북 구미·포항국가산업단지의 입주 대상 업종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자원 재생) 업종을 추가한다.

그간 해당 산단에는 이차전지 연관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어,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된 리사이클링 기업의 입주가 제한돼 왔다. 이에 리사이클링을 배터리 핵심 제조공정으로 보고 입주 문턱을 낮춘다. 신규투자 발생 기대 규모는 약 1000억 원이다.

바이오 부문에서는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제조시설 증설을 지원한다. 기존 제조시설과 연결된 공장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5300억 원 상당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게 된다.



충북 청주 오창 소재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조감도. /뉴스시스

전북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분양률이 낮은 음료제조업 부지를 기업 수요가 높은 식품제조업 부지로 변경한다.

첨단·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산업·RE100(재생에너지 100%) 등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업종 특례지구 요건도 수위를 낮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 1면 '빌게이즈 오늘 방한...'서 계속

SMR 특별법 내달 시행

국내 기업과 테라파워 간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정부가 5년마다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실증, 전문인력 양성, 산업 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라파워와 뉴스케일 파워 등 해외 SMR 개발사들이 잇달아 한국을 찾은 배경에는 원자로 제작에 필요한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원자로 제작에는 수백개 업체가 참여하고 일부 기자재는 수년 전부터 발주해야 하는 만큼 제조시설과 협력업체 기반을 갖춘 국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 이번 방안을 계기로 테라파워와의 협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